

# FTA극복을 위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시책 개선방안 연구\*

Industry Complex of Rural Areas Policy Improvement Research

유세준(Se-Joon Yoo)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목 차

- |                        |          |
|------------------------|----------|
| I. 서 언                 | V. 결 언   |
| II. 농공단지 개발정책의 일반적 고찰  | 참고문헌     |
| III. 농공단지 지원제도 실태와 문제점 | Abstract |
| IV. 농공단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

## Abstract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evaluate performance of Industry Complex of Rural Areas Policy and to suggest solutions to solve problems of the policy and development plans for Industry Complex of Rural Areas in Korea.

The Industry Complex of Rural Areas Policy has contributed to increase of income and growth of industries in farming areas. Since business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rapidly and competition has been getting fierce, Korean small business in rural are as need to develop new strategie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thesis will suggest public programs to support for development of Korean small businesses in rural areas.

The suggestions are as below

- 1) plans to form funds to provide financial aid to small business in rural areas. Specific plans to raise funds for public programs that would be executed by National Industry Complex of Rural Areas Association are included.
- 2) plans to improve abilities of SBCs to develop technologies
- 3) plans to establish marketing channels for SBCs in rural areas.
- 4) plans to create systems to promote restructuring in Industry Complex of Rural Area

Key Words : Industry Complex, Rural Areas Policy, small business public programs, financial aid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인천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 I. 서 언

한국경제는 산업화를 시작한 196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수도권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한 결과 반세기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하게 되자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농촌인구들이 증가하게 되어 농촌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sup>1)</sup>, 소득기반과 생활환경, 문화, 복지, 교육여건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농촌지역은 자발적 성장능력을 상실하여 ‘낙후지역(backward regions)’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농촌지역이 낙후지역으로 전락함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적 성장이 이제는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즉, 경제성장으로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은 주택난, 교통문제, 교육문제, 환경오염과 같은 전형적인 도시문제가 발생되어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 효과가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부담하여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한편, 인구의 심각한 이출(out-migration)로 경제적 자활능력을 상실한 농촌지역에 대하여 정부가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기반이 지극히 취약함에 따라 정책지원의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고,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산업부문은 성장과 도약이 기대되고 있지만, 농업부문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농촌경제의 침체상황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도시지역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을 비롯한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피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며, 지역 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도시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과 같이 농촌지역이 침체국면을 벗어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래 추진된 정부가 주도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 성장전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sup>2)</sup>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경제가 침체된 원인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산업화정책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1) 우리나라는 1930년대까지 총인구의 95%정도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약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1960년대 산업화정책으로 인하여 도시화율이 1999년기준 87.6%로 증가하고 전체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박종화, 지역경제론, 박영사, 2002. p.374. 참조

2) 허재환 외, 한국지역경제론, 법문사, 1998. p.128

침체된 농촌지역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농촌의 생활환경, 문화·복지여건의 개선, 농업의 현대화와 같은 농촌지역개발정책도 필요하지만, 농촌지역에 산업이 유치되도록 하여 농촌지역이 침체되게 된 근본원인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산업이 유치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기능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존재이고, 기업은 국력의 기본이 되며, 세금을 내는 조직,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곳, 새로운 기술의 산실,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적극적인 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취업과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산업과 기관, 시설 등이 동반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의 유출 방지차원을 넘어 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그럼으로써 생활환경과 교육, 문화, 복지여건 등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이 다수 유치되어야 하는데, 농촌지역에 산업유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입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당연히 농촌지역에 산업 유치를 위한 입지공급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환경문제이다.

우리나라 농촌을 농산(農産)병행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한 계획입지를 조성하여 공급하여야 하는데, 따라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 보다는 10~30만㎡내외의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전문단지 또는 특화단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입지형태가 농공단지나 협동화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3년 이래 추진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며, 이를 토대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Ⅱ. 농공단지 개발정책의 일반적 고찰

### 1. 농공단지 개발정책 추진 배경과 경과

정부는 1970년대에 추진한 새마을공장 건설 사업이 지역분산을 강조하다보니 입지정책적인 고려가 미흡하여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지역에 새마을공장이 입지하게 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판로확보 미흡, 경영능력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촌 지역에 2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유희노동력을 활용한 농외소득과 고용의 증대를 통해 농촌지역경제에

3) 임동환, “농공단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산업입지』 제27호, 한국산업단지공단, 2007. p. 112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1981년 11월부터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이 주관하는 「농외 소득원개발기획단」을 설치하고 농공단지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84년 5월 경제기획원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무 추진한 「농외소득원개발기획단」은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에 1개소씩 7개의 시범농공단지가 지정하였다.<sup>4)</sup>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의 농공단지 개발정책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추진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물론 농공단지 개발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지만 지금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농공단지 개발 신청을 받아 승인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공단지 정책의 근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sup>5)</sup>,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sup>6)</sup>,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으로 농공단지의 지정·조성·관리·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농어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농공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농어촌정비법」은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과 생산제품 판매 및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은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사업 지원·분양 및 입주지원·환경관리·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이 추진하기 시작한 농공단지 개발정책은 지식경제부가 주관이 되어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정책의 주관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공단지 지원정책은 2007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 359개개 단지를 조성하였고,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약 29조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및 12만 여명의 농어촌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등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농공단지를 개발한 현황과 그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4) 시범 지정된 농공단지는 경남 함안의 이은농공단지('84.11.15지정), 경북 영천의 고경농공단지('84.9.7지정), 전북 남원의 인월농공단지('84.9.20지정), 충남 공주의 장기농공단지('84.12.5지정), 충북 진천의 진천농공단지('84.8.29지정), 강원 횡성의 목계농공단지('85.3.11지정), 전남 함평의 학교농공단지('85.12.23)이다.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이하 '산업입지법'으로 표기함.

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이하 '산업집적법'으로 표기함.

## 2. 농공단지 개발 현황 및 성과)

### 1) 조성 및 공급실적

농공단지 개발정책이 추진 된지 25여년이 경과한 2007년 말 현재 전국에 359개의 농공단지 51,885천㎡가 조성되어, 이중 공공용지나 지원시설 면적을 제외한 분양대상 면적 41,478천㎡ 중 40,148천㎡이 공급되어 96.8%의 높은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2-1〉 농공단지 조성현황

(단위 : 천㎡, %)

구 분	단지수	면 적	분 양 현 황			분양률
			분양대상	분 양	미분양	
국 가	31	481,139	204,272	200,068	4,204	97.9
일 반	257	299,217	121,154	115,694	5,460	95.5
도시첨단	3	290	58	56	2	96.6
농 공	359	51,885	41,478	40,148	1,330	96.8
계	650	832,531	366,962	355,966	10,996	97.0

주) 1. 국가산업단지중 제조시설이 없는 단지는 통계대상에서 제외됨(고정국가, 대죽자원비축기지, 삼일자원 비축기지, 월성원전, 지세포자원비축기지)

2. 분양률은 조성된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대상면적은 산업시설구역만 해당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7. 12

조성된 농공단지 수 기준으로 보면 농공단지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650개)의 55.2%가 농공단지이지만, 농공단지가 비교적 소규모로 조성되기 때문에 면적기준으로 보면 전국 산업단지(832,531천㎡) 면적의 6.2%(51,885천㎡)이다. 그러나 농공단지 분양률은 96.8%로 국가단지 (97.9%)나 일반산업단지 (95.5%)와 비슷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농공단지의 지역별 조성현황을 보면 충청지역에 75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64개, 경북 54개, 충북 41개 등 충청권과 영남권의 집적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경기) 및 대도시권(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도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1990년대 이전에 지정된 것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해당단지가 대도시권에 포함된 것이며, 현재 농공단지의 지정대상 지역은 농어촌 지역 중 시·읍 및 시·읍과 연결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7) 농공단지 현황자료는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산업자위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농공단지현황」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있어 수도권 및 광역시 내에서의 농공단지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 2-2〉 지역별 농공단지 조성 현황

(단위 : 개, 천㎡, %)

구 분	단지수	조성 면적	분양대상 면적	분양현황		
				분양	미분양	분양률
부산	1	259	189	189	-	100.0
대구	2	353	284	284	-	100.0
광주	1	324	262	262	-	100.0
울산	4	597	457	457	-	100.0
경기	1	117	96	96	-	100.0
강원	30	4,386	3,389	2,923	466	86.2
충북	41	5,196	4,365	4,365	-	100.0
충남	75	10,994	8,528	8,361	167	98.0
전북	41	5,913	4,789	4,732	57	98.8
전남	42	6,928	5,748	5,359	389	93.2
경북	54	8,944	7,002	6,873	129	98.2
경남	64	7,562	6,129	6,007	122	98.0
제주	3	312	240	240	-	100.0
합 계	359	51,885	41,478	40,148	1,330	96.8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7. 12

지역별 분양현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강원(86.2%), 전남(93.2%) 등의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입지유형별로 볼 때 우선지원지역 및 추가지원지역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공업집적도가 낮고,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시기별로 농공단지 지정현황을 보면 전체 산업단지 359개의 59%인 211개 단지가 1985~199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는 1980년대 중반이후 산업정책이 성장위주에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지역안배와 지역개발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1995~2000년 동안에 조성된 단지는 20개에 그쳐, 외환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후 국내경제의 안정화로 농공단지 조성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3〉 시기별·지역별 농공단지 조성현황

(단위 : 개)

구분	85년이전	85-90	91-95	96-00	00-05	05년이후	계
부 산	-	1	-	-	-	-	1
대 구	-	2	-	-	-	-	2
광 주	-	1	-	-	-	-	1
울 산	-	2	1	1	-	-	4
경 기	-	1	-	-	-	-	1
강 원	1	18	4	-	6	1	30
충 북	1	30	3	3	3	1	41
충 남	1	43	10	4	12	5	75
전 북	1	19	8	3	7	3	41
전 남	1	28	6	-	5	2	42
경 북	1	37	10	5	1	-	54
경 남	1	27	13	4	10	9	64
제 주	-	2	1	-	-	-	3
합 계	7	211	56	20	44	21	359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7년 말 기준)

## 2) 입주기업 가동 현황

2007년 말까지 조성되어 공급된 현재 359개 농공단지에 총 5,231개사가 입주<sup>8)</sup>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당 평균 15개사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단지(980개사) 및 일반산업단지(61개사)에 비해 단지 규모가 영세한 편이다.

지역별 입주업체수를 보면 경북이 852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 837개사, 충남 829개사, 경남 762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당 입주업체수를 보면 부산(21개사), 대구(64개사), 광주(47개사), 울산(116개사) 등 대도시 주변 단지를 중심으로 단지 당 입주업체수가 많고, 경기(4개사)는 전체 평균(15개사) 이하로 분석된다.

한편, 농공단지의 가동률은 93.7%로 국가단지 87.2%, 일반산업단지 86.2%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가동업체수 기준이 아닌 입주계약업체수 기준임.

〈표 2-4〉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

(단위 : 개, %)

구 분	단지수	입주계약	공장설립완료			가동률
			가 동	휴폐업	소 계	
부산	1	21	21	-	21	100.0
대구	2	64	64	-	64	100.0
광주	1	47	46	1	47	97.9
울산	4	116	107	9	116	92.2
경기	1	4	4	-	4	100.0
강원	30	668	576	35	611	94.3
충북	41	386	337	24	361	93.4
충남	75	829	727	17	744	97.7
전북	41	593	467	61	528	88.4
전남	42	837	728	59	787	92.5
경북	54	852	744	63	807	92.2
경남	64	762	654	26	680	96.2
제주	3	52	41	8	49	83.7
합 계	359	5,231	4,516	303	4,819	93.7

주) 가동률은 자료구독상의 한계로 공장설립완료업체 대비 가동 업체 수 비율로 산출한 것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7. 12

### 3) 생산, 수출, 고용 현황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총 생산액은 28조 8천억 원으로 개별 단지 당 802억 원, 업체당 55억 원의 생산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생산액 중에서 수출비중은 67억 4,885만 달러로, 개별 단지 당 1,880만 달러, 업체당 129만 달러를 수출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는 116,191명으로 단지 당 평균 324명, 업체당 22명이 고용되어 있다. 특히, 이들 종업원들은 농공단지가 소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이어서, 당초 농공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한 농촌인력의 고용창출과 농의소득증대라는 정책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 지역별 농공단지 생산, 수출, 고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천 달러, 명)

구분	단지수	생산	비중	수출	비중	고용	비중
부산	1	661,262	2.3	268,683	4.0	1,799	1.5
대구	2	258,116	0.9	17,685	0.3	1,110	1.0
광주	1	453,695	1.6	108,566	1.6	1,748	1.5
울산	4	920,935	3.2	152,923	2.3	3,938	3.4
경기	1	174,535	0.6	7,214	0.1	288	0.2
강원	30	1,670,616	5.8	1,060,629	15.7	10,964	9.4
충북	41	4,393,825	15.2	794,355	11.8	12,917	11.1
충남	75	6,091,489	21.1	1,313,453	19.5	23,238	20.0
전북	41	2,290,122	7.9	225,094	3.3	9,613	8.3
전남	42	2,023,080	7.0	619,017	9.2	11,624	10.0
경북	54	5,863,073	20.3	1,211,990	18.0	20,311	17.5
경남	64	3,930,795	13.6	964,077	14.3	18,157	15.6
제주	3	113,360	0.4	5,169	0.1	484	0.4
총계	359	28,844,903	100.0	6,748,855	100	116,191	100.0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7. 12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생산성을 국가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와 비교해 보면 생산, 수출, 고용 전반에 걸쳐 국가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생산성과 고용실적을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와 비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의 조성목적과 입주하는 기업들의 규모나, 기업의 핵심역량이 농공단지 입주기업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당연히 핵심역량이 양호한 상태라면 국가나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했을 것이고,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산업구조 자체가 내수위주의 영세한 규모의 제조업이 대부분이고, 이들 기업들

9)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연구보고 등을 종합해 보면, 농공단지의 생산성이나 수출비중, 고용창출능력이 국가산업단지 등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생산성 등이 높게 평가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평가절하고 있지만, 연구자의 관점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국가산업단지 등에 입주가 어려운 열악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생산성 및 고용성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교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스포츠 경기 중 체급별 경기에 대하여 중량급 선수와 경량급 선수를 단순 비교하여 경량급 선수의 파워가 약하다고 평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성과는 입주기업의 실정을 감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의 경쟁력 또한 낮은 수준인 것은 당연할 것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생산성을 나타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기여도는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산업구조 현황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업종별 입주현황을 보면 잡화(기타)가 1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조립금속(15.9%), 음식료(12.7%), 석유화학(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음식료 업종의 입주비중이 높은 대신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공단지의 조성목적과도 유관한 것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과 다양한 지역특산물을 가공·처리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농공단지에 많이 입주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지역별 입주업종 구조를 보면 강원과 전남 등은 음식료 업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대구, 경북은 섬유·의복이 지역 내 농공단지의 주력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남, 부산, 울산 등은 기계, 운송장비 업종의 입주비중이 높은 편이며, 전남지역은 석유화학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업종구조는 지역적 산업분포와도 비슷한 것으로 보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발전 전략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하다.

#### 5) 농공단지 조성의 방향

농공단지는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공업을 유치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발지역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인접하여 공장입지 여건이 유리한 충청지역의 농공단지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남·호남·강원 지역은 개발속도가 늦은 편이다. 농공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업 부문에 비하여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농업 부문과 농어촌지역의 구조 조정을 위해서였다. 농업 부문이 사양화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경제 기반이 위축되고 많은 수의 농촌 주민들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어촌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도시지역 인구집중의 주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만 가지고는 농촌지역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농촌공업화에 의한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으로서 농공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농공단지의 지정은 원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수도권지역 및 광역시와 인접한 지역, 그리고 대규모 공업단지가 이미 개발된 지역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대상 농어촌지역을 개발수준에 따라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단지개발 규모 및 지원 내용을 차등화하고 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하여는 조세·금융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세

와 법인세가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80% 감면되며, 사업용 자산 가액의 15% 범위 내에서 투자 준비금을 손금(損金)으로 산입해 주고 특별감가상각(特別減價償却)을 100% 추가 인정해 주고 있다. 입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우선지원 농어촌'의 경우 시설자금 5억 원까지, 운전자금 3억 원까지 연이자 7%로 빌려 주고 있다. 그리고 부지조성을 위하여 평당 약 5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멀리 위치한 농공단지의 공장가동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주요 원인은 일부 단지의 경우 입주 기업의 확보가 용이치 않으며, 특히 필요한 인력확보가 어려운 점이 농공단지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공장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공업용수·교통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생산된 제품의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휴폐업 등으로 운영난에 빠진 농공단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초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농공단지 가운데 동일·유사업종이나 지역 특화업종 단지를 전문단지로 지정해 부지조성비 지원규모를 늘리고, 새로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 시·군별 면적한도와 부지조성비를 확대하는 등 농공단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3. 국민 경제적 성과

FTA의 파고가 거칠게 일고 있다. 농어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수 있는 상황은 더욱더 아닌 현실에서 농공단지의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품목별 현황과 문제점, 현재 상태의 경쟁력 비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앞으로의 비전이 제시되어 있어 농업인에게 우리 농업의 가능성을 심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 개발전략을 통하여 FTA 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농업의 살길은 오직 기술농업'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술 개발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학관연 협력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현장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농공단지 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공단지는 지난 25여 년 동안 전국에 349개 단지가 조성되어 5,231개사가 입주 가동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최근 제조업 공동화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 보다 높은 가동 율과 분양 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이해된다.

또한 농공단지는 국가산업단지나 대도시지역의 일반산업단지에 비하여 인프라측면에서 불리한 여건

에 있고, 우수한 기술 인력은 물론 단순 생산인력 조달에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생산성, 수출액, 고용규모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 농공단지가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12만여 명으로 이들은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이 대부분이고, 핵심기술인력 등 일부인원만이 비현지인인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Ⅲ. 농공단지 지원제도 실태와 문제점

#### 1. 지원제도 실태

농공단지 지원제도는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토지의 취득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토지개발지원과 사업시행자의 비용분담 차원에서 세제 및 금융지원, 폐수처리장 설치비 지원으로 구분되며,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세제·금융상의 지원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영지원으로 구분된다.

##### 1)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영 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와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세제상의 지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과할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개발초기 자금지원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셋째,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융자 및 보조를 통해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지방세는 취득한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기업이 농공단지에 입주 후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은 50%)하고 있으며, 국세는 2009년 말까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있다.

둘째,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입주 시에 많은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데,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은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과 신규로 입주하는 대기업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sup>10)</sup>한다.

셋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애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하여 기술지도, 판매지원, 인력확보지원, 교육훈련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의 경영지원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해 지자체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의 제품 판매애로를 지원하고 있다.

## 2. 지원제도의 문제점

### 1) 노후단지 개량을 위한 지원제도 미비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제도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단지조성비가 지원이 되고,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장건축과 설비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90년대 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들은 노후화되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노후·낙후된 농공단지를 개량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2)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그러나 입주기업은 일반 정책자금에만 의존해야할 여건이어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입주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 3) 관계부처의 통합

농공단지 지원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단지 조성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부분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과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종합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기관별로 입장 차이가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10)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③항

#### 4) 입주기업 정책자금 지원 축소

농공단지 입주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이다. 물론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공장 건축자금, 기계 설비 도입자금, 운전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향후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유용도 조사 결과 76.4%가 자금지원 확대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sup>11)</sup>되었으나, 농공단지 입주기업 예산규모는 오히려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형편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비교적 경쟁력이 낮은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정책지원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입주기업들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5) 인프라설비 보완

농공단지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농공단지 조성되기 시작한지 2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용수 시설의 부족과 산업용 가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결과적으로 인력유출을 초래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 IV. 농공단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1.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현재 농공단지는 지자체가 직접 조성하거나, 민간 사업자를 통해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농공단지 지원정책의 문제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제도 미비하여 농공단지 조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예산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분리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현행과 같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자인 지자체나 민간단체에게 지원되면,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반드시 농공단지 조성에 지원하지 않고 다른 현안사업에 배정해

11)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관리·지원 효율화방안 연구」 (2007.2)

도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농공단지 구성에 따른 보조금 지원예산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과는 별도로 농어촌지역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해야 농공단지 구성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지만 입주 당시의 입주기업 수 등을 고려한 폐수처리시설비만 지원이 되고, 대체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대한 폐수처리시설비 지원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입주당시에 비하여 생산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이러한 지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 2.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 1)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

정부는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농공단지가 그러한 정책목적에 많은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가 농공단지를 조성정책을 추진한 이래 전국에 5천개 사 이상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데, 농공단지에 관한 사후관리체계는 미흡한 여건이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대부분은 제조업체들이다.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국내 임금이 너무 올라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제조기반을 이전하고 있어 국내의 제조기반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기지로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농·산·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의 인력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로의 이동하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조업체들이 집단화하게 되면 기업의 유치로 인한 경제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도 제조업을 따라 이동하는 성향이 있다. 즉 농공단지가 입주함으로써 제조업이 입주하고, 제조업의 입주에 따라 금융, 통신, 물류와 같은 관련 산업과 서비스산업이 함께 유치되게 되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기업자체적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해당 지역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정책자금 우선지원 기반 확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조달문제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일반금융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sup>12)</sup>.

은행과 같은 일반금융기관은 기업이 보유한 물적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히 규모가 영세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일반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그 규모도 크게 하여야 할 것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매년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자금수요를 조사해 보면 그 규모는 1,000억 원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정부의 융자지원자금 규모는 200억 원 수준이어서 입주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한정된 농공단지 육성자금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대상을 선별하여 경쟁력이 커질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입주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자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수혜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변화추세에 맞추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정부도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단순 가공업체나 조립중심의 기업들이 대부분인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 수혜대상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적합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만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도에 농공단지 클러스터지원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동종 내지 유사한 업종이 군집된 지역에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을 클러스터화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다양한 업종의 비교적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의 집합체인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입주기업들의 개별적인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노후 농공단지의 개선

2007년 말 현재 조성된 359개 농공단지 중에서 1990년대 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가 전체 농공단지

12) 일반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 대출자금의 회수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도가 높은 소수의 기업에게만 대출이 편중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지 않은 일반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 60%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농공단지는 보수와 시설개체가 필요한 노후단지이다. 정부는 신규 농공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있지만, 농공단지를 새로이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인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노후 단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는 시행되어 왔지만, 종합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후단지를 개선하기 위한 농공단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동력 공급 상태·시장접근성·기반도로시설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농공단지 리모델링정책을 추진해야 것이다.

#### 4) 판로 지원체계 구축

현대 경영에 있어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과제 중의 하나가 마케팅이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성장·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도 마케팅능력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기업들이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소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망을 구축해야 하는 한계성이 있다. 또한 더 큰 어려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영세하다는 점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작용하여 생산제품을 납품할 기업을 찾거나 판로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 중에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이 다수 있음에 따라 이들 기업들의 우수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대규모 소비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편,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떨어진 원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최근에 인터넷 등을 통한 상품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On-Line을 통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품 구매자들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우수한 생산제품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 카탈로그, 홈페이지, 인터넷쇼핑몰 구축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기 용이한 여건에 있다. 즉, 지역주민들이나 가내수공업들이 보유한 특화상품 기술을 기업들로 하여금 양산체제를 갖추게 한다면 지역특화상품의 상업화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지역특화상품의 생산제품의 성공가능성, 기업의 지속적인 마케팅 능력, 향후 R&D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계 일류상품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시장규모는 협소하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필요하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개발한 우수한 제품, 특히, 지역특화 상품의 경우 가장 지역적인 제품이 가장 세계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겨냥한 시장동향 파악으로부터, 진출전략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재원마련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5) 기술혁신 및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대기업에 비하여 경영자의 기술개발 의욕의 불충분, 사내 기술개발시스템의 미비,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위험부담 의지결여 등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기업이 무한경쟁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술과 제품의 Life Cycle이 짧아지고,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많은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는 과제를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입지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싶어도, 근무여건 등을 따지는 최근의 인력들의 취업성향을 감안할 때 결코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은 입주기업만의 노력이 아닌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실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이해된다. 즉,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동일 내지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 군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 특히, 기술력이 열악한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실정에 적합한 기술지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높은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술적인 애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이 적합할 것이다.

### 6) 구안으로 해소 및 인력개발 지원

농공단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 등이 도심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방에 조성되어 있다. 농공단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지방에 소재하는 것은 정책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농공단지가 지방에 조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입주기

업들이 인력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우수한 기술 인력은 물론이고 단순 생산직 인력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들에게 인력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제도 마련이 입주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인력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외국인 근로자나, 미혼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숙사 시설의 마련을 지원하거나, 기혼인력 등 주변지역 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여건의 개선 또는 통근버스지원제도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의 대부분이 노년층과 주부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인력을 입주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기회의 확대지원이 요구된다.

## 7) 입주기업 연합체의 지원강화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 발전하기는 한계가 있다. 즉 중소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기업들끼리 경영의 애로사항을 상부상조해서 해결하거나, 경영 및 기술적인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연합체인 (사)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된다. 즉, 연합회 및 광역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 8) FTA 극복을 위한 농공단지 인프라 구축

농공단지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공업용수 시설의 부족과 산업용 가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FTA 극복책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다. 열악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대폭적인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모든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농공단지에 공장하나 건설 하는데 상위 지자체, 상위 행정의 유연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FTA 파고는 넘기 힘들 것이다. 인프라가 구축된 농공단지에서 농민들은 농한기에 2가지 일을 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맞춤형 소비자 마케팅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또한 입주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의 개선, 주차장,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이 취약성을 보완하여 인력유출을 막아 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제도 보완 및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 V. 결 언

FTA의 파고가 거칠게 일고 있다. 농어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닌 현실에서 농공단지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기술 개발전략을 통하여 FTA 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농업의 살길은 오직 기술농업'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중의 하나가 농공단지조성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기술 개발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학관연 협력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현장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8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농공단지가 25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351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었고 5,321개의 제조업이 입주 가동되고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농촌지역에 산업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고, 현지인들의 고용을 통해 이농향도현상을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을 농산(農産)병행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문제를 고려한 계획입지를 조성하여 공급하여야 하는데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 보다는 10~30만㎡내외의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전문단지 또는 특화단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입지형태가 농공단지나 협동화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들이 집단화하게 되면 기업의 유치로 인한 경제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도 제조업을 따라 이동하는 성향이 있다. 즉 농공단지가 입주함으로써 제조업이 입주하고, 제조업의 입주에 따라 금융, 통신, 물류와 같은 관련 산업과 서비스산업이 함께 유치되게 되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변화추세에 맞추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정부도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단순 가공업체나 조립중심의 기업들이 대부분인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 수혜대상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적합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만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입지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싶어도, 근무여건 등을 따지는 최근의 인력들의 취업성향을 감안할 때 결코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은 입주기업만의 노력이 아닌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FTA체결과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촌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에 산업 유치를 통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공단지 조성정책은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기는 하였지만, 입주기업들에 지원은 미미하였다고 평가된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보호·육성』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변화되어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우량기업을 육성하고, 기술과 혁신의 전파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농공단지에는 단순조립 및 가공기업들이 다수 유치되어야 농공단지 조성의 기본 목적인 농촌지역의 유희인력을 활용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당연히 이들 기업들도 영세성을 극복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며, 지역의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고영구외, “농공단지사업의 성과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0권제1호, 2003년 3월호, 농촌경제연구원.
- 박중화, 『지역경제론』, 박영사, 2002.
- 산업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2007.
- 산업자원부·중소기업진흥공단, 『농공단지현황』, 2007.
- 산업자원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2007.
- 유세준·임동환, 『중소기업의 이해』, 법문사, 2001.
- 임동환, “농공단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산업입지』 제27호, 한국산업단지공단, 2007.
- 임동환, “FTA극복과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지원시책 추진전략” 『농공단지 지원정책의 이해』, 지식경제부, 2008.
- 최경환,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농촌경제』 제24권제2호, 2001 여름호,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관리·지원 효율화방안 연구』, 2007.
- 허재완외, 『한국지역경제론』, 법문사, 1998.